

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7차 회의(4.23.)

- ☐ 지금부터 「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」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☐ 금일 아침 14분기 GDP가 발표되었습니다.
 - 전기대비 1.7%를 기록하면서, 2020년 3/4분기 이후 5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
 -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호조에 더해서,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자본시장활성화, 소비지원대책 등 정책효과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.
 - 또한 중동전쟁에 신속히 대응한 것도 일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.
 - 특히, 어제 KDI에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최대 $\Delta 0.8\%p$ 낮추었으며,
 - 소비위축은 관측되지 않았으면서 정부의 정책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.
- ☐ 중동전쟁 휴전협상이 지연되고, 종전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,
 -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거시경제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[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]

- ☐ 오늘 논의할 첫 번째 안건은 '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'입니다.
- ☐ 현재 정부는 4~5월간 원유 대체물량 1억 1,800만배럴을 확보하고, 정유사가 신청한 비축유 스왑(SWAP) 물량 3,200만 배럴도 원활히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원유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- ☐ 4.24일 0시부터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, 석유 소비량, 그리고 재정부담,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.

[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 - 국민제안 조치결과 및 향후 대응]

- 두 번째, ‘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’입니다.
- 정부는 2.27일부터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협력하여 체감물가 부담 품목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현재까지 총 117건의 제안을 접수했습니다.
 - 국민들께서는 물가부담이 큰 분야로 먹거리, 에너지와 주거·통신비 등을 꼽아주셨습니다.
 - 부당한 가격 책정에 대한 제재강화와 가격안정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도 해주셨습니다.
- 정부는 그간 국민 목소리를 적극반영하여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, 통신요금제 개편 등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했고,
 - 4~6월중 320억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% 할인판매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 - 특히,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인하폭도 현재 △10%에서 △25%로 확대하고, 적용기간도 6월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.

[건설자재 가격·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]

- 다음으로, ‘건설자재 가격·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’입니다.
- 건설자재 원료 수급안정을 위해 특별현장점검 등을 통한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수입절차 간소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지원하겠습니다.
 - 수급차질로 가격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공공공사 단가에 조속히 반영하고, 건설업계에 신규자금 공급, 보증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.

[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 및 조사결과] [반복담합 근절방안]

- ☐ 다음으로, '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 및 조사결과'와 '반복담합 근절방안'입니다.
 - ☐ 정부는 6개 제지업체의 인쇄용지 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해 총 3,383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, 독자적 가격 재결정명령과 검찰고발 등 엄중제재키로 했습니다.
 - ☐ 아울러, 담합을 반복하여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.
 - 앞으로 반복담합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100% 가중부과하고, 필요시 등록·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.
 - 입찰 담합뿐 아니라 가격 등 非입찰 방식의 담합에 대해서도 공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, 담합 주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씩 늘려*, 담합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해 나가겠습니다.
- *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: (담합 주도자) 1년 → 1년 6개월, (단순 가담자) 6개월 → 1년
- ☐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께서 「인쇄용지 담합분야 점검 및 조사결과」와 「반복담합 근절방안」에 대해, 국토부 차관께서 「건설자재 가격·수급동향 및 대응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다. (공정위, 국토부 모두발언)
 - ☐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